
**'23년 제2차 OECD
공공청렴작업반(SPIO) 회의
참석 보고서**

2023. 12.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1. 회의 개요

- 회의명 : 공공청렴작업반 회의(Meeting of the Working Party of Senior Public Integrity Officials)
- 개최 일자 및 장소 : 2023.11.6.(월) ~ 11.7.(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 주관기관 : OECD 공공행정국(Public Governance Directorate)
- 참석자
 - 한국 측 :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이승은 주무관
 -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 각국 대표 등

2. 핵심요지

- 배경
 - 공직 채용 전후 청렴성 강화, 청렴성 확보를 위한 기술·정보 관리, 공공청렴을 위한 행동적 통찰력 등 공공부문 청렴성 증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제2차 공공청렴작업반 회의 개최
- 주요 내용
 - 공직 채용 전후 청렴성 강화를 위한 방안과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현실적 한계점과 주요 사례 등에 대해 논의
 - 민간분야는 투명성과 책임성 증진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는 만큼, 부패척결 파트너로서의 민간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글로벌 전략에 대해 논의
 - 인간 행동의 근본적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한 반부패 정책·전략 수립의 중요성과 이를 통한 청렴 문화 확산 방안과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부패 예방 시스템 활용 현황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제도와 어려움에 대해 공유

- 2024.3월 개최 예정인 반부패·청렴 포럼(GACIF)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주요 의제 및 우선순위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실시
- 현재 개발중인 '반부패·청렴성 전망' 작업 일정, SPIO 온라인 플랫폼인 O.N.E Community 활용 안내, 공공청렴지표(원칙10) 작업에 대한 사전결과 및 SPIO 명칭 변경 등 주요 SPIO 의제별 진행 현황에 대해 업데이트 함.

3. 상세 내용

□ 공직 채용 전후 청렴성 강화

- (사무국) 민간-공공 분야 간 이동(채용)은 공공 서비스 전문성 강화와 조직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이해충돌 발생 소지와 특정 개인 또는 분야에 불공정 특혜 유발 가능성을 증가시킴. 그러나 공공과 민간 간 이동의 자유 보장을 통해 역량과 경험있는 적절한 인사를 배치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인바, 이를 위한 제도적인 공직 채용 전후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
- (프랑스) 고위급 회전문 채용에 대한 당국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함. 이와 관련, 회전문 채용에 대한 규제뿐 아니라 부패 추적, 재산 신고 등 공직자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윤리강령과 로비를 관리하는 법률 등이 있음. 고위공직자는 겸업 제한, 민간 분야(외부) 특정 활동 및 퇴직 후 재취업 시 허가 등의 규제가 존재함. 채용 전 청렴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직자 임용 시 범죄 위험성과 법적 이해관계 등을 확인해야 함.
- (영국) 공공과 민간분야의 유동성을 위해 법제화된 체계보다는 주로 원칙기반의 지침에 의존함. 1975년 이후 발전해 온 업무임용규칙

(Business Appointment Rules, BARs)은 장관급을 비롯한 공무원, 특별자문관, 군대 등이 적용대상이며, 연공서열 수준, 공직 임용 후 맡은 역할의 성격 등 특정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됨. 또한 독립된 업무임명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Business Appointments, ACoBA)는 고위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 채용에 대한 검토·자문을 제공함. 이러한 시스템의 한계로는 지침과 자문을 기반으로 함에 따라 상황별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으나, 퇴직자의 행동 관리에 대한 제한과 위반 시 제재 가능한 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데 있음. 공공-민간 분야 간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러한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해 규정의 현대화, 승인 신청절차 간소화, 적용 범위 확대 등 BARs 개혁에 대한 움직임이 있음.

- (스위스) 공공-민간분야 이동 시 해당 직위에 따라 상이한 규제가 적용됨. 채용 전 이해충돌 위험성과 민간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 등을 확인하며, △이해충돌 위험 존재, △공공기관 신뢰와 평판을 저해하는 활동, △신규사업에서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냉각기간(약 6-12개월)을 갖도록 함. 통상 연방공무원에게 비밀 유지 의무, 이해충돌 상황 신고에 있어 더 많은 의무가 요구됨. 부패위험에 기반한 대응을 위해 국가반부패전략(2021-2024)이 수립되었으며, 총 4단계의 절차(1단계 평가: 이해충돌 요소 평가→2단계 이행: 냉각기간 준수 여부 감시→3단계 보고: 국가반부패전략 이행 평가→4단계 규제: 감사)를 거치도록 함. 한계점으로 이해충돌 위험 해소를 위한 냉각기간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지적됨.
- (헝가리) 2022년 EU 예산 기금 활용 관리 하에 청렴당국법(Integrity Authority Act)이 제정되었으며, 헝가리 의회에 의해 자치적 국가행정기관인 청렴당국이 수립됨. 설립목적은 헝가리 사회의 부패에 대한 수용적 태도 제거, 위험평가 및 분석보고서 등 발표, 이해관계자와 공공조달 절차 발전 지원 등이 있음. 공공-민간 분야 이동 관

런, 헝가리는 전체 공무원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규정이 부재하고
파편화되어 있으며, 주로 이해충돌 위험과 정보 오용 관리에 집중
되어 있음. 또한 회전문 인사 규제 적용을 받는 기관이 소수이며
(감사원, 국가언론기관 등), 냉각기간에도 적용대상과 기간 등에 대
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됨.

※ OECD 공공청렴 과장, 프랑스 공직투명성고등당국 국제파트너십팀장, 영국
내각사무소 선임정책분석가, 스위스 연방외교부 계약조달팀장, 헝가리 청렴
당국 관계자 발표

□ 2024 OECD 글로벌 반부패&청렴 포럼(GAFIC) 브레인스토밍

- (사무국) 2024 OECD 글로벌 반부패&청렴포럼이 내년 3월
(3.26.-27.) 개최 예정인바, 동 회의는 UN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
국제반부패회의에 이어 대규모 반부패 국제회의 중 하나로 자리
매김함. 지난 5월 개최된 포럼에는 900여명이 대면참석하였고, 영
상 참석자도 1,800여명에 달하였음. 이 포럼은 정부, 기업, 시민사
회 등 다중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유용한 글로벌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음.
- 대표단은 동 포럼에서 다룰 주제로 △반부패 전략과 행동계획의
성과평가와 모니터링에 있어서의 어려움, △민간분야와의 협력,
△남반구(Global South)의 역할 확대, △청렴구축에 있어 리더십의
역할, △경제위기 하 반부패·청렴에 대한 자원 확보, △양극화
사회에서 공공서비스의 공정성 유지와 기관 신뢰 재구축 방안,
△로비 규제에 있어 도전과제, △청렴과 연계된 허위정보 대응,
△행동적 통찰력과 데이터 분석 등을 제안함.

□ 유럽 구조개혁을 통한 청렴성과 반부패 개혁 추진

- 유럽집행위원회 총국의 구조개혁지원 프로젝트는 민주주의 강화와 법치주의 발전을 위한 다국가(다지역) 프로젝트로서 기술지원 수단(Technical Support Instrument, TSI)을 통해 진행됨. TSI는 요구기반의 맞춤형 기술전문가로 방대한 지식과 경험을 신속하게 활용가능함. TSI는 유럽위원회 내부 전문가와 국제기구, 회원국 및 민간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됨.
- 다국가 프로젝트의 궁극적 목적은 유럽위원회가 제공하는 정책과 지침을 준수함으로써 회원국의 반부패 역량을 강화하고, 사법디지털화를 포함한 효율적인 사법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음. 동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 국가(지역)가 동일한 우선순위에 대응함으로써 자원 활용을 최적화하고, 상호학습과 자매기구의 네트워크 확대구축이 가능함.
- 또한 프로젝트 아이디어 저장소를 통해 당국간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의견이 비슷한 국가간 소통하고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
 - ※ 유럽위원회 사법·반부패 분야 정책관 발표

□ 부패척결을 위해 민간 분야 파트너를 활성화하기 위한 글로벌 구상

- 공공청렴에 대한 OECD 권고안은 반부패를 위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부패척결을 위한 민간분야 파트너 활성화(GPS)는 지난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발족된 이니셔티브로서, 미국 국무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부패 척결을 위한 혁신적 민간분야 사례를 공유하고, 투명성과 책임성 지원을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음. GPS는 공공청렴에 대한 권고, 로비에 대한 권고, 외국공무원 뇌물방지협약, OECD 다국적 기업을 위한 지침 등을 포함하여 OECD 작업과 도구의 구현을 지원함.
- GPS는 반부패와 청렴성 증진에 있어 기업과 정부 간 지식 공유·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서, 기업과 정부에 혁신적 반부패 해결

책을 선별·확산하는 것이 목적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50개 이상 다국적 기업과 시민사회 지도자 그리고 고위급 정부 대표가 반부패 리더스 허브(Anti-Corruption Leader's Hub, ACLH)를 구성함. 주요 활동으로는 정부-기업 간 신뢰가능한 대화와 민간 부문의 정책 참여, 국영기업 동료학습 강화, 위험기반 실사를 통한 공급망 청렴성 확보, OECD 및 UNODC 협력을 통한 정부 인센티브와 평가를 통한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증진 워크숍 등이 있음.

※ OECD 공공 거버넌스 공공분야 청렴성 과장 발표

□ 청렴성 확보를 위한 기술과 데이터 관리

- (사무국) 기술과 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은 청렴성 확보에 있어 강력한 도구임. 그러나 그 잠재력 활용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임. 정보분석의 우선순위로는 법과 규정, 디지털 전략, 정보 거버넌스 등의 데이터 생태계, 수요평가, 신뢰성 평가, 위험모델 등의 방법론 그리고 국제주도 관습 형성 및 실용 커뮤니티 형성 등을 위한 파트너십이 있음.
- (루마니아) 공공조달 시스템인 DDI를 활용한 이해충돌 상황 하 계약체결 방지 사례에 대해 소개함. 계약당국과 입찰자는 공공조달 시스템에 결정적 요소와 회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보분석과 이해관계자 교차확인 등 예방적 필터링을 통해 이해충돌 위험이 있을 시 계약당국 기관장에게 통보함. 이러한 시스템에는 110만건 이상의 개인, 계약당국, 정책결정자에 관한 정보가 “예방 분석”에 제공되며, 이를 통해 180건, 약 4.6억 규모의 잠재적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였고, 전체적인 이해충돌 상황이 52% 감소함.
- (브라질) 감사원의 입찰감사에 있어 데이터분석 활용에 대해 발표함. OECD에 의하면 공공조달은 부패에 가장 취약한 분야로서 절차

의 복잡성과 공무원, 기업가 및 다중이해관계자와의 밀접한 상호 작용에 의해 부패 위험성이 증가함. 감사원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입찰자 위험을 점수화하기 위한 'DIKE'를 개발하여 감사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함. 정보조달시스템, 공식 저널, 투명성 포털을 통해 입찰자에 대한 구조화된 정보를 확보하고, 각 지표에 따라 위험 점수를 환산하여 총 위험을 산출함.

- (우크라이나) 청렴 디지털 생태계 개발 경험에 대해 발표함. 우크라이나 반부패 IT 시스템으로는 공무원 재산신고 전자등록, 국가 반부패프로그램 모니터링 시스템, 공익신고자 포털, 공무원 소통 플랫폼인 반부패 포털, 부패공무원 등록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공무원 재산신고 시스템은 18개 주별 등록을 통합하여 연간 백만건 이상이 신고됨. 공익신고자 포털은 부패신고를 관리하는 포괄적인 정보보호시스템으로 익명성과 안전성이 보장됨.

※ OECD 공공분야 청렴, 공공거버넌스 정책 자문관, 루마니아 국가청렴성 기관 사무총장, 브라질 투명성부 국제협력조정관, 우크라이나 국가부패 예방청장 자문관 발표

□ OECD 반부패 청렴성 전망

- 2023년 상반기 SPIO 회의에서 개발에 합의한 반부패 청렴성 전망은 OECD 공공청렴 지표에서 추출한 간결한 정보 중심의 문서로서 OECD 국가들이 어떠한 공공청렴과 반부패 틀을 갖고 세계 도전요인과 추세에 대응해야 하는지 통찰력을 제공하는 자료가 될 것임. 목적은 △청렴에 대한 우선순위 내재화, △청렴체계와 정책입안 위협 자원 재평가, △동료학습과 미래 업무 지침에 대한 정보 설정 등이 있음.
- 주요 일정으로는 2024년 초 1차 사실보고서에 대한 초안 회람 후 공공거버넌스 위원회에 승인을 위한 보고서를 송부, 2024.3월

반부패청렴포럼(GACIF)에서 발표 예정임.

※ OECD 공공거버넌스 과장, OECD 공공거버넌스 정책분석가 발표

□ 공공청렴을 위한 행동 통찰력

- (사무국) 행동 통찰력은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된 정책을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정책입안자는 여전히 인간 행동에 대해 비현실적인 모델을 가정하는 경우가 많음. OECD는 행동 통찰력을 정책에 적용하는 5개 주요 단계(행동(Behavior), 분석(Analysis), 전략(Strategy), 개입(Intervention), 변화(Change))를 담은 OECD BASIC 프레임워크 툴킷을 개발함.
 - 엄격한 통제적 반부패 정책에서 좋은 행동을 이끌어내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리더십의 역할 및 조직문화 또한 기관의 청렴성 향상 및 소속직원 행동 변화에 핵심 역할을 함.
- (루마니아) OECD 지원 하에 진행된 위험관리 방법론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함.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기관의 부패위험 분류가 일관되지 않고 오류가 있음을 확인함. 위험관리 방법론은 7단계로 구성되며, 이와 연결된 22가지 행동을 실제 식별할 수 있는 행동흐름도 개발함. 이에 대한 OECD 주요 권고사항으로는 △ 개입조치를 위한 매개지표를 포함한 위험등록 재설계, △ 부패위험 방법론 채택을 위한 사용자가이드 설계, △ 부패위험관리 안내를 위한 웹기반 앱 개발, △ 각 부처에 부패위험관리 실무그룹을 지원할 전담 조직 또는 인력 구성이 있음.
- (브라질) 브라질 연방정부의 청렴성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강화의 일환으로 OECD와 공동으로 시행한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함. 공공청렴에서의 행동 통찰력은 심리적, 인지적 및 사회적 차원의 요소를 청렴정책과 결합하여 적용됨. 특히 청렴정책에 있어 고위급 리더십이

중요한바, 이는 자원할당, 기관 우선순위 설정, 조율 감독 등 기관 신뢰성 확보와 공무원 가치참여 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리더는 직원들에게 “도덕적 판사”보다는 “도덕적 인간” 및 “도덕적 관리자”로 인식되어야 하며, 직원과 열린 소통을 통해 직원 스스로 윤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역할을 해야 함.

- (슬로바키아) 현재 중앙정부에 행동 통찰력을 적용하여 새로운 반부패 전략과 공공기관 임무에 대한 개별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 중에 있음. 경험적 데이터로부터 실행 가능한 통찰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공공부문 리더십 역할에 대한 기존 연구를 보완할 것임. 상급자는 개인의 윤리적 행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바, 이에 대한 행동적 연구를 바탕으로 청렴 정책을 설계해 나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음.

※ OECD 공공거버넌스 팀리더, OECD 공공거버넌스 행동과학자, 루마니아 법무부 자문관, 브라질 투명성부 국제협력조정관, 슬로바키아 공공의회 이사 발표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 어려움과 교훈

- (캐나다) 공무원공개보호법이 2007년부터 시행중이며, 현재 상임위원회 권고사항을 담은 개정안이 의회 절차 진행 중에 있음. 이 법은 윤리적 업무문화 증진과 공공에 대한 국가적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공공분야의 심각한 부정행위를 신고하고, 신고 공무원을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합법적 절차를 제공하고 있음. 2017년 이 법에 대한 권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2022년 11월 연방공개절차 증진과 신고 공무원 보호·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동법 개정을 위한 TF가 구성되어 현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중임.
- (슬로바키아) 공익신고자법이 2023년에 제정되었으며, 2022년부터 이 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인식증진 캠페인을 시작함. “비침묵

은 금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TV, 라디오,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경찰청장, 공익신고자, 연예인 등 유명인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함. 그 결과 현재 12%에서 23%까지 인식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가장 경제활동이 활발한 20-50대 인식이 가장 높아졌음.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분명한 비전, 자원확보와 더불어 사회 전체적인 접근이 성공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우크라이나) 부패예방법과 형사소송법에 공익신고자보호에 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부패예방청 실무가이드에도 담음. 공익신고자보호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과 공익신고자를 위한 온라인 과정을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상을 위한 예산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 중임. 특히 올해 9월 공익신고자 포털을 개설하여 시민들의 익명신고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최근 고등반부패법원에서 공익신고자 보상에 대한 첫 판결이 내려지는 성과가 있었음. 반면, 포털의 익명성과 기밀성으로 정보수집 시스템으로 발전이 어렵다는 한계도 있음.
- (이탈리아) 공익신고자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없으나, 사회적 평판, 직장 내 성과평가 등 간접적 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음. 온라인 플랫폼은 익명신고를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하나, 정보획득의 한계성 등으로 인해 진전된 수사를 이끌어내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캐나다 재무이사회 사무국 선임과장, 슬로바키아 공무원평의회 이사회원, 이탈리아 반부패청 선임자문관, 우크라이나 부패예방청 부청장 발표

□ OECD 공공청렴지표 업데이트(원칙10)

- (사무국) 현재 SPIO TF와 개발중인 공공청렴 지표 관련 진행 현황에 대해 안내함. 회원국으로부터 수집한 원칙 10(위험관리)에 대한

데이터를 12월에 공개할 계획임. 현재 내부 관리와 위험관리에 대한 국가별 데이터를 수집·분석함. 핀란드, 폴란드와 양자 협업을 통해 지표에 대한 테스트를 마쳤으며, 긍정적 피드백을 받음. 지표는 전문가 의견이 아닌, 증거 기반 데이터로서 내부 통제와 내부 감사 관련 수치화된 자료를 제공함.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국가별 강점과 약점을 확인하고, 법적 측면뿐 아니라 전반적인 현실 파악에 집중함. 대부분 국가는 잘 발달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으나,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 체계적 평가는 아직 없었음.

- 공공청렴 지표 개발은 이해충돌관리(2003), 로비투명성·청렴성(2010), 공공청렴(2017)에 대한 OECD 권고사항을 기준으로 SPIO와 공공청렴지표 TF의 소통을 통해 이루어짐. 또한 청렴성 분석, 최고감사기구와 굿거버넌스 등의 비교분석 보고서 및 심화된 국가 청렴성 검토, 국가별 목표 이행지원·역량개발 등을 통한 작업도 이루어짐.
- 조만간 TF는 원칙13(참여) 정치자금에 대한 작업 진행 예정이며, 지표에 대한 데이터는 향후 발간될 전망(Outlook)에도 일부 발췌되어 사용될 예정임. 또한 각국이 지표 관련 제공한 정보는 웹사이트에 공개되며, 학계, 일반시민, 연구자 등 모두가 활용할 수 있음.

※ OECD 공공 거버넌스 공공분야 청렴부 차장 발표

□ SPIO 업데이트

- SPIO 온라인 플랫폼인 O.N.E Community를 활용하여 모든 관련 회의 문서, 아젠다, 코멘트 등 업로드를 통해 회원국 간 효율적인 소통과 정보 공유를 독려함.
- 로비활동과 영향력 행사에 대한 권고 업데이트 관련, 접수된 의견을 정리 중으로 조만간 최종안을 회람할 예정임.

- 최근 의장이 새로 임명됨에 따라 2024년 사무국 개편을 서면으로 개시할 예정임. 이에 각국의 활발한 참여를 요청함.
- 2022.6월 처음 건의된 SPIO 명칭 변경에 대해, 지난 5월 논의한 새로운 명칭안인 **‘Working Party on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in Government’**에 대해 일부 회원국의 피드백을 받고 뇌물방지작업반(WGB)과도 논의를 해왔음. 이런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명칭변경에 대한 최종문서를 회람할 예정이며, 그 후 승인을 위해 공공거버넌스 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임.